

현행 헌법(1987년 전부개정) 기준에서 공주민제(DCA)를 “정책 아이디어”가 아니라 “헌법질서에 실장되는 제도”로 놓고 보면, 핵심 설계(조세의 지분 전환, 시민지분 신탁/계정, 추출상한, 분산의결·알고리즘 거버넌스 등)가 여러 지점에서 **위헌(또는 강한 위헌소지)**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. 쟁점을 조문 축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

1) 재산권·주주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위험

공주민제가 **강제적 지분 이전·희석(dilution)**, 의결권 구조 재편, 배당/자본이득의 상한·만료 같은 형태로 구현되면, 주주(및 기업)의 재산권·재산적 기대를 직접 제한한다.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되(제23조 제1항)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·사용·제한에는 **법률**과 **정당보상**을 요구한다(제23조 제3항)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또한 기본권 제한은 “필요한 경우에 한하여” 법률로 해야 하고, **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**(제37조 제2항)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- 특히 TEC(조세의 지분 전환)가 “세금”의 외피를 쓰더라도 실질이 **재산권 이전**에 가까우면, 단순 조세가 아니라 **준(準)수용**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상·절차·비례성 심사가 매우 엄격해진다.

2) ‘사영기업의 국유·공유 이전/경영 통제 금지’와의 정면 충돌 가능성

헌법 제126조는 원칙적으로 **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·관리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**. 다만 “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”가 있고 “법률이 정하는 경우”에만 예외를 둔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공주민제가 C-COT(시민지분신탁)·N-DSA(국민사회지분계정) 같은 장치를 통해 기업 지분을 광범위하게 공적 성격의 기구로 집적시키고, 그 기구가 실질적으로 **경영에 영향력을 행사**하면, 형식이 “시민”이라도 기능이 **공유화 + 경영통제**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.

즉, 공주민제가 의도하는 “소유·거버넌스의 구조 재배치”는 제126조 예외요건(긴절한 필요성)과 비례성 문턱을 넘기 매우 어렵다.

3) 경제질서(자유시장·사적 자치)와의 긴장: ‘규제·조정’의 한계를 넘어설 위험

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질서의 기본을 **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**으로 둔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제2항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**규제와 조정**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(소득분배, 경제력 남용 방지 등), 문언 자체가 “규제·조정”이지 “대규모 소유권 재편”을 예정한다고 보긴 어

럽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- “추출 상한/만료”가 광범위·상시적으로 작동하면, 규제 수준을 넘어 **사적 자치의 핵심(수익·지배권의 실질)**을 잠식하는 제도로 읽힐 수 있다.
- 결국 공주민제는 제119조 제2항을 근거로 정당화하기보다, 오히려 제119조 제1항 및 제23조와 충돌하며 과잉금지(제37조 제2항) 심사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4) 조세법률주의·납세의무 틀 안에서 TEC의 “형식-실질 불일치” 문제

헌법은 납세의무(제38조)와 조세법률주의(제59조)를 둔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문제는 TEC가 **현금 납부를 주식/수익권으로 대체**하는 순간, 과세요건·평가·징수·불복절차가 일반 조세보다 훨씬 복잡해지고, 실질적으로는 “현금세”가 아니라 **재산권 변형(강제투자)**에 가까워진다.

- 조세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**예측가능성**을 줘야 하는데, 지분평가·유동성·가격변동을 내재한 TEC는 조세법률주의 취지와 긴장한다. ()
- 특히 특정 업종/기업에 집중되면 평등원칙(아래 5)과 결합해 위험 리스크가 커진다.

5) 평등원칙·특수계급 금지: “시민계정/프로토콜 권력”의 새로운 계급화 위험

헌법은 법 앞의 평등(제11조 제1항)과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(제11조 제2항)를 둔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공주민제가 설계상 “초유지분층”을 약화시키려는 목표를 갖더라도, 역설적으로 다음이 발생할 수 있다.

- DDP/프로토콜을 설계·감사·승인하는 **상설 기구(위원회/노드/감사자)**가 실질적 권력을 독점하면, 법이 금지하는 “새 특수계급”에 준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.
- 시민 배분에서 연령·국적·거주·복수국적·수형자·장기체류자 등 경계선이 생기면, “누가 시민 지분을 받는가” 자체가 평등심사의 핵이 된다. (차등이 가능하더라도 합리적 근거·비례성이 요구된다.)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6) 국민주권·대의제·입법권과의 충돌: “알고리즘 규

칙”이 사실상 법이 되는 문제

헌법은 주권(제1조)과 입법권의 귀속(제40조)을 명확히 한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공주민제가 공적 레일에서 **자동집행 규칙(알고리즘 거버넌스)**으로 권리·의무(배분, 제한, 제재)를 좌우하면, 그것은 실질적으로 “법규범” 기능을 한다. 그런데 그 규칙이 국회의 통제 밖에서 운영되면 다음 문제가 생긴다.

- **법률유보:** 국민의 권리·의무를 좌우하는 핵심 규칙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(제40조 취지)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- **위임의 한계:** 행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규칙을 만들더라도 법률의 구체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(제75조)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요컨대 “프로토콜이 곧 법”이 되는 순간, 헌정구조(국회 중심의 민주적 정당성)와 충돌한다.

7) 적법절차·권리구제: 자동배분·자동제재 구조의 절차적 취약

헌법은 적법절차 원리를 전제한다(제12조의 적법절차 문언 및 제37조 제2항의 본질침해 금지와 결함)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공주민제에서 흔히 상정되는 자동화 요소(예: 추출 상한 위반 자동제재, 배분 정지, 의결권 제한, 데이터 사용료 자동부과)는 **사전통지·의견제출·불복절차**가 약하면 절차위헌 리스크가 커진다. “빠른 레일”을 강하게 할수록 이 취약점이 커진다.

8) 개인정보·통신비밀과의 긴장: ‘국민 데이터’의 집적·활용이 헌법적 한계에 부딪힘

공주민제가 데이터 수익을 시민에게 귀속시키려면, 국가 또는 준공적 기구가 데이터를 대규모로 집적·결합·평가·과금해야 한다. 그러나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(제17조), 통신의 비밀(제18조)을 보장한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- “국민 데이터 자산”을 제도화하는 순간, **동의·목적제한·최소수집·비식별의 실효성**이 핵심 쟁점이 되고, 조금만 설계가 거칠어도 위헌 논란이 즉시 발생한다.
-

9) 사회보장 국가의무와의 충돌 가능성: “배당국가”가 복지 의무를 대체할 수 없음

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보장·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둔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

공주민제가 “복지를 배당으로 대체”하는 방향으로 읽히면, 경기·수익 변동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가 흔들릴 수 있어 **헌법상 사회국가 의무를 약화**시키는 제도로 공격받을 수 있다.

10) 노동질서(근로3권)와의 불화: ‘노동 이후’ 서사가 헌법상 노동권 보호를 약화시키면 위험

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·단체교섭권·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(제33조)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 공주민제가 “노동이 약화/소멸”을 전제로 제도 중심을 이동시키더라도, 그 과정에서 노동3권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약화시키면 헌법 충돌이 된다. “노동을 넘어서다”는 서사가 곧바로 “노동권의 후퇴”로 연결되면 방어가 어렵다.

정리: 현행 헌법 프레임에서의 결론

현행 헌법은 경제민주화를 허용하지만(제119조 제2항), 동시에 **사유재산(제23조)**, **사영기업 공유화/경영통제 금지(제126조)**, **조세법률주의(제59조)**, **국회 중심의 민주적 정당성(제1조·제40조)**, ****사생활·통신비밀(제17조·제18조)****을 강하게 세워 둔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(#)) 그래서 공주민제가 “구조적 소유권 재편 + 자동집행 거버넌스”로 갈수록, 현행 헌법 하에서는 **정당화 비용이 폭증**하고, 다수 장치가 **부분위헌 또는 전면위헌** 공격을 받을 지점이 생긴다.

현행 헌법 아래에서 존치시키려면 필연적으로 “강제 이전/통제” 성격을 줄이고, 법률유보·정당보상·절차보장·프라이버시 설계를 매우 두껍게 해야 하는데, 그렇게 되면 공주민제가 목표로 하는 ‘급진적 구조변환’의 속도·강도가 상당히 약화되는 딜레마가 생긴다.